

‘창의적’ 기업에 ‘창조적’ 부담 경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되는데,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시책에 따라 600만원 유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감면되는 연차등록료만큼을 직원 복지에 쓸 계획입니다.



개인·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30% 일괄 감면됐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혜택도 부여됐습니다.



- '12년 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4~6년분 등록료 30% 일괄감면과 20% 추가 감면할 경우, 약 68억원의 기업부담 경감 예상



개선 전

중소기업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시 최초 3년분에 한해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감면 없음

개선 후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4~6년분 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4~6년분 등록료 20% 추가 감면(2년 한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 '14.3월)

작지만 강한 기업! 사람이 경쟁력이니까요!

광주에서 소규모 산업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뿐인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빠듯한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C씨와 같은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참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증대

'14.10 기준, 5인 미만 중소기업 380개소에서
420명 청년채용 진행



개선 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개선 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14.4월)

숲 가꾸기 사업 어때요?

산림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숲 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법인을 신규로 등록 예정인 대표 A씨는 법인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최소 9명 이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B씨의 경우, 일용직이면서도 본인이 속한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처리돼 다른 산림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최소 조건이 9명에서 7명으로 완화돼 산림사업법인의 창업 증가 및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부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에서 제외돼 직업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 **산림사업법인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 및 연 27억원 직접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산림사업법인 중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9명(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개선 후

산림사업법인 중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7명(기술자 3, 기능인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림청, '14.6월)

컨설팅? 비싸지 않아요!

“FTA 수출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고 돈도 부담돼서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영세 중소기업 대표 W씨의 말입니다.

이제 해외마케팅 능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FTA 수출컨설팅 사업이 개선된 것입니다. FTA 수출컨설팅 사업은 원산지 증명, 마케팅 전략수립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횟수를 늘리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 부담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한 결과 수혜 중소기업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기업수가 649 ➔ 1,270개로
약 2배 증가 예상



개선 전

- ‘13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지원횟수 : 1회/년
- 업체 부담금 :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기업들이 30% 부담

개선 후

- ‘14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개정
- 지원횟수 : 3회/년
- 업체 부담금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무료 / 10~50억원 이하 - 10%
50~500억원 이하 - 20% / 500억원 초과 - 30%
-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기청, '14.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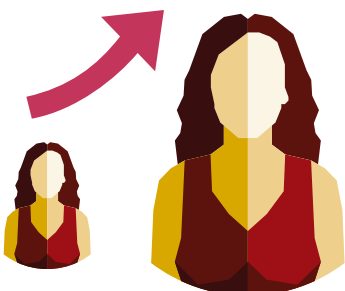
공공구매에도 여풍당당!

A여성기업은 이동형 서랍을 취급하는 업체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믿고 B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에 성공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중 B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14년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
(4조5,000억원 ➡ 5조3,000억원),
여성 일자리 3,722명 창출 추정



개선 전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시 일정 비율(물품·용역 5%, 공사3%)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권고사항에 불과

개선 후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 '14.7월)

혁신이란 이런 것!

“인력이 없어 하루하루 정신없는 중소기업에겐 부담스런 규제네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Z사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3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갱신평가
신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평가보다 30만원이 더
비싼 신규평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Z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증 ‘이노비즈’와 경영혁신 인증 ‘메인비즈’ 신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만 해 기업 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 연 약 800개사, 약 2억원 비용 절감 및
행정부담 완화 기대



개선 전

유효기간 만료일 35일전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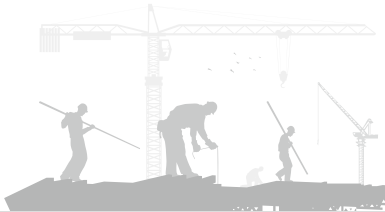
개선 후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중기청, '14.7월)

직업훈련 시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일 잘하려고 받는 직업훈련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교대업무 때문에 못나가게 됐는데 결석이라니요? 학교도 공가 처리라는게 있는데 ……” 직업훈련 시간 때문에 일어났던 불편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정한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간주해 훈련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애경사로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변경해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돼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대제 근로자 등의 교육훈련 수료율 제고로 정부지원 불이익 해소



개선 전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되며 훈련참여 기회가 상실됨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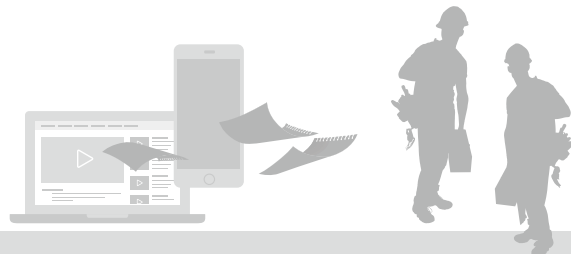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애경사 등으로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른 시간대에 대체수강 가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고용부, '14.11월)

일용근로자 이중 신고, 이제 한번이면 OK!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절차가 참 번거롭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고충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신고가 면제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용 모바일 ‘앱’이 개발·보급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층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약 1,800만건에 대한 중복신고
해소로 사업주의 신고 편의성 및 활력
제고



개선 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분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개선 후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국세청 신고를 면제, 이중신고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및 불편 해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국세청, '14.9월)

실수로 소멸된 특허권, 걱정 마세요!

“직원의 실수로 특허료를 미납했는데, 사업 준비단계란 이유로 특허권 회복이 안 된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누에 성분을 이용하는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허료 미납으로 신기술 특허권이 소멸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회복 신청을 했으나 ‘실시 중인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로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즉 사업을 준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했으며 특허료의 2배만 납부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허권 회복료 인화로
연간 약 4억5,000만원 부담 경감**



개선 전

특허권자의 불가피한 사유, 실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이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제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하려면 특허료의 3배를 납부

개선 후

**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
‘특허법’ 개정 (특허청, '14.12월)